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b>강원도민일보</b>	23면	강원특자도 범국민추진협 추진단 내달 양양서 워크숍	1
<b>江原日報</b>	온라인	與 일부 사고당협 인선보류 소식에 '원주을' 후보자들 촉각	1
<b>江原日報</b>	03면	강원자치도의회, 중국 지린성 교류 재개 모색	2
<b>강원도민일보</b>	22면	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지린성 교류 방문 26일까지	2
서울경제T	온라인	강원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중국 지린성 방문 ... ..	3
<b>노컷뉴스</b>	온라인	동해 마주한 강원도 야권 "일본 원전오염수 투기 저지"	4
<b>江原日報</b>	17면	"시민들 함께 현장 참여하는 리빙랩 저널리즘 확대되길"	5
<b>강원도민일보</b>	03면	도의회 기행위원장직 놓고 눈치싸움 치열	6
<b>江原日報</b>	03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 위한 지역특화산업 분과 회의	6
<b>江原日報</b>	온라인	[동정]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속희 도...	7
<b>江原日報</b>	21면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	7
<b>강원도민일보</b>	09면	[동정] 박기영 (왼쪽) 도의회안전건설위원장·양속희 도의...	7
<b>江原日報</b>	01면	도, 매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공개 ... 실효성 '글썸'	8
<b>江原日報</b>	01면	"일본산 수산물 안 팔아요"	8
<b>江原日報</b>	03면	"어민 경영안정 지원" vs "제2의 태평양 전쟁"	9
<b>江原日報</b>	08면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 오후 1시 개시 전망"	9
<b>江原日報</b>	02면	면 지역 공습경보 울려도 대피할 곳 없어	10
<b>江原日報</b>	02면	민방위 훈련 중 맞습니다	11
<b>江原日報</b>	02면	"상비약 없고 물 안 나와" 대피소 부실 관리 도마위	11
<b>江原日報</b>	02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지정 취소	12
<b>강원도민일보</b>	03면	도내 첨단산업 예산 정부안 반영...내년 국비 확보 청신호	13
<b>강원도민일보</b>	03면	국회운영개선소위	13
<b>강원도민일보</b>	19면	[사설] 태백선 EMU 효과 선로 개선 관건	14
<b>강원도민일보</b>	19면	[사설] 바이오국가산단, 지역 균형 고려해야	15
<b>江原日報</b>	19면	[사설]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이다	16
<b>江原日報</b>	19면	[사설] 日 오염수 방류, 동해안 어민 보호 더욱 철저해야	17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4 ( )  
23

### 강원특자도 범국민추진협 추진단 내달 양양서 워크숍

지난 7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이 내달 6일 양양군 설해원에서 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추진단 회장단은 워크숍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지원 전략, 추진단 활동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

도지사를 비롯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추진단 회장 11명이 참석한다. 추진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강원특별법 입법 지원 관련 추진단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부터

도민 여론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정준화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 부단장은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을 위해선 영서·영동 지역 구분 없이 강원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10월, 범국민추진협의회 400여명 위원이 참석하는 결집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 江原日報

2023 08 24 ( )

### 與 일부 사고당협 인선보류 소식에 '원주을' 후보자들 촉각

국민의힘 조강특위 24일 인선 결과 발표 예고  
총선 앞두고 '원주을' 당협위원장 임명 여부 관심

속보=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4일 전국 36곳 사고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인선 발표(본보 지난 20일자 3면 보도)를 할 예정인 가운데 '원주을' 당협위원장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설'이 나올 만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조직위원장 인선 여부에 관심이 커지면서 중앙 이슈에 민감한 '원주을' 또한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강특위가 36곳 중 12곳은 단수 추천, '울산 북구당협' 등 일부는 인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부터 1년 넘게 공석 중인 '원주을'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총 8명이 후보자중 1명의 당협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지역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 연말부터 총선이 진행되는 내년 4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실제로 당 핵심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3~4개월 후 공천 심사가 시작되는데 몇개월 만에 지역 수장을 바꾸는 것도 원활한 선거 준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원주 연구의 새로운 인물들도 차기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지난달 26~27일 사고당협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 원주을은 올해 신규로 신청한 김기홍(45)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최재민(39) 도의원과 지난해 신청했던 권이중(51)변호사, 박동수(65)변호사, 안재윤(58)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67)전 중앙당 부대변인, 장승호(53)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66)전 원주시의원 등 총 8명이 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3 08 24 ( )

江原日報

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국제교류협회(회장: 원제용)가 23일 중국 지린성에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시찰했다.

## 강원자치도의회, 중국 지린성 교류 재개 모색

中 초청받은 한중의원국제교류협  
26일까지 동북아박람회 등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국제교류협회가 중국 지린성을 찾아 우호 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의원국제교류협회는 23일 중국 지린성 장춘(장춘)에서 개막한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해 강원도관을 비롯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동북아 주요 시장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을 살폈다. 또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한중도시관을 시찰했다.

지린성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한중의원국제교류협회 원제용 회장, 엄윤순 부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심영곤 운영위원장, 하석균·김정수·원미희·윤길로·김희철 도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박람회와 제3회 동북아지방협력회의의 경제무역상담회 참석, 지린성 농업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갖고 이를 통해 우호교류 재개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임홍근 중앙회장과 강원지회 회원이 동행, 도내 민간 차원의 한중교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원제용 회장은 “강원자치도와 지린성은 1994년부터, 양 의회는 1995년 교류를 시작해 2008년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2016년 이후 약화된 한중관계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교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 방문이 상호교류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 08 24 ( )

강원도민일보

22

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지린성 교류 방문 2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가 한중(장춘)국제협력시범구에 방문하는 등 오는 26일까지 중국 지린성에 머문다. 도의회 한중의원 교류협회(회장 원제용)는 지난 22일 중국 지린성에 도착해 제3차 동북아지방협력회의의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석하는 등 교류일정을 시작했다. 23일엔 제14

회 중국-동북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방문했다. 24일엔 지린성 농업연구소, 장춘시 도시계획전시관 방문이 예정됐다.

한중의원 교류협회에는 원제용회장과 엄윤순 부회장, 심영곤·하석균·김정수·원미희·윤길로·김희철 의원 등 총 8명이 활동한다.

이설화

2023 08 23 ( )

# TV

## 강원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 중국 지린성 방문 ... 우호교류 재개방안 모색

강원순 기자



<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 참석 >



< 한중도시관 시찰 >



23일 중국 지린성 창춘(장춘)에서 개막한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해 강원도관을 비롯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원들. [사진=강원도 의회]

[춘천=강원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회장 : 원제용(원주6), 부회장 : 엄윤순(인제), 회원 : 심영곤, 하석균, 김정수, 원미희, 윤길로, 김희철)는 23일 중국 지린성 창춘(장춘)에서 개막한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해 강원도관을 비롯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동북아 주요 시장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린성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박람회 및 제3회 동북아지방협력회의 경제무역상담회 참석,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및 한중도시관 시찰, 지린성 농업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호교류 재개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원제용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린성은 지난 1994년부터 교류협정을 체결 후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양 도-성 의회 간에도 1995년 교류를 시작으로, 2008년 우호교류 합의를 체결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2016년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교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 방문이 상호교류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임흥근 중앙회 회장 및 강원지회 회원 5명이 동행하여 도내 민간차원의 한중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k10@sedaily.com

2023 08 23 ( )

노컷뉴스

## 동해 마주한 강원도 야권 "일본 원전오염수 투기 저지"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 발대  
정의당 강원도당 "윤 대통령,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분명히 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2일 춘천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강원도당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제공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오는 24일 바다에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동해를 마주하고 있는 강원도 야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춘천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강원도당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비록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이 방류를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호연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강원도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배출하는 행위가 과학에 근거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번도 제대로 검증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방류를 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24일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전 세계인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맹신하는 IAEA 보고서도 해양투기 이후 벌어질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분명히 하라.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강원도의회에도 "오염수는 수산시장 수조가 아니라 동해안 주민들이 마주하는 바다에 버려진다. 핵 오염수로 인한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포함,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 江原日報

2023 08 24 ( )  
17

##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2023년 제4차 회의

2023년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달 26일 본사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해 6·7월 두 달간 보도된 강원일보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강원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풍기 강원대 교수) 4차 회의가 지난달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독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남익기자

# “시민들 함께 현장 참여하는 리빙랩 저널리즘 확대되길”

△김풍기 위원장=두 달 만에 배서 기쁘다. 그동안 강원일보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으셨을 것 같다.

△하광운 위원=지난 6월은 보훈의 달이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언제 개정됐는지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으나 보훈의 대상이 국민운동, 전쟁 참여, 민주화에 기여 등 총 세 가지였다.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보훈 대상 등은 사실 아직까지도 전쟁, 농민운동에 국한돼 있다. 올해도 보훈 대상이나 이런 사회적인 관심들이 두 가지 주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와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강릉고에 가면 교정에 기념비가 두 개 서 있다. 한 분은 군인 신분으로 훈련 중에 수류탄을 맨몸으로 막은 분이고, 또 한 분은 국민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편향성 없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훈처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다. 모두가 근거할 수 있는 담론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같이 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별님 위원=젊은 기자들이 쓴 기사가 너무 재미있게 읽혔다. 그중 가장 재미있게 본 기사는 일상에 답을 찾는 골목실험실이다. 춘천시나 관계기관, 대학, 언론이 함께 모여서 춘천을 발전시켜 가자는 취지로 강원일보에서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자들이 언론의 힘을 통해 지역사회나 사회를 발전시켜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춘천이 조금



김풍기 강원대 교수, 하광운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정별님 강원지방연구소 공보이사, 심훈 한림대 교수, 모혜란 총기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류인출 도의원

더 발전하는 데 언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공지천이나 MBC 주변 상상마당 쪽에 반려건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 정말 많다. 물론 많은 분이 에티켓을 잘 지켜주지만, 배설물을 안 치우는 분도 많다. 춘천 시에서 반려동물 시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춘천시와 함께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배변 봉투도 나눠 주면서 홍보를 하면 재미있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심훈 위원=보급률 1위인 후쿠이 신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준비해왔다. 7월 후쿠이신문에서 눈에 띈 것은 1면 광고였다. 1면 하단 광고에 책과 관련된 광고만 7월에 5개가 나왔다. 7월26일자 밑에 있는 책 광고는 후쿠이현 초등학교 독서 감상 쿠푸르가 신문 주체로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선생님으로부터 추천받은 5·6학년이 출품하면 좋은 책들도 소개돼 있다. 일반 도서와 잡지 광고 등은 물론 온라인 강좌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미뤄 보아 후쿠이 신문이 교양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 김풍기 “대관령음악제 지역 국한된 시선 지양해야”
- 하광운 “민주주의 편향성 없는 공동체적 개념 접근”
- 정별님 “골목실험실 보도 지역사회 발전 견인 기여”
- 심훈 “1면 광고서 교양 관련 정보 제공되면 좋을 듯”
- 모혜란 “강원 미래 신사업 등 일관성 있게 다뤄지길”
- 류인출 “사회 이슈·단체장 공약 사후관리 보도 필요”

다. 강원일보 1면 광고도 쪽 봤었는데 태권도 대회, 해수욕장 소식, 도의회 이야기, 여름캠핑 위주로 돼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교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또 강원일보는 인터넷 접속률, 수익, 열독률 전부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들과 같은 수치로 경쟁하기보다는 10년, 20년을 길게 내다보고 독자로부터 사랑 받고, 사랑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편집국 안에서 고민하고, 신문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모혜란 위원=강원일보가 경제

면에서 다루는 ‘이코노미 플러스’는 주로 기업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부담 없이 알리기 위한 코너로 알고 있다. 관심 있게 봤는데 건설업, 예산안과, 지역 PPL, 업체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 이 면에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또 강원일보를 보다 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그게 한결 같지 않고 자주 바뀌다 보니 일관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어쩌면 지역 신문이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 미래 신사업 전환

프로젝트라고 해서 특별 지역 과제를 시작했다. 바이오헬스, 액티비티 등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협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다루면 좋겠다.

△김풍기 위원장=신문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매체이다 보니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이슈를 제기하고 알리는 역할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또 모든 기자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담당기자가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있는 기사를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외부 기자를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류인출 위원=신문의 특성상 사회면에 산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단체장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기사를 그때그때 실어준다. 하지만 사후에 단체장이 이걸 하기로 했다, 혹은 이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초등 학교 교사 문제에 대해 지금은 딱 며칠만 1년 뒤에 조응해준다. 그 이

후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매일 쓰긴 어렵지만 월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럴 정도면 뒤 지난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후에 이렇게 처리됐고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김풍기 위원장=제가 이달에 재미있게 읽은 기사는 세 번 연속 연재했던 대관령음악제 기사였다. 대관령음악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논란도 있었다. 왜 강원도의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민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쓰냐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칼럼도 쓰고 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었다. 외국의 광장도 유명한 축제들은 주민도 즐거워야 하지만 그와 함께 외부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즐기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역에 국한돼서 대관령음악제를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다.

△심은석 편집국장=좋은 말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리빙랩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실생활에서 기자들이 시민들과 같이 현장에 뛰어 들고 체험해 보고 기사를 써 보도를 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인데 올해 강원일보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했다. 기자협회보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리빙랩 저널리즘)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이코노미 플러스의 경우 어떤 날은 기업을 소개하다가, 어떤 날은 또 다른 걸 찾다가 그러면서 계속 바뀌고 있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찾아야겠다. 또 언론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보도록 노력하겠다.

정리=김민희기자 mirim@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4 ( )  
03

## 도의회 기행위원장직 놓고 눈치싸움 치열

내일 추대 예정, 의원들 출마 고심  
공석이 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직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기행위는 오는 25일 '추대' 방식으로 기행위원장직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행위원장직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선된 한창수 전 위원장이 부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도의회의 규칙에 따르면, 부의장직은 상임위원장직 등과 겸임할 수 없다. 이는 도의회 특별위원장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행위 소속 의원들은 '눈치싸움' 중

이다. 부위원장인 김길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 위원장 선출시 '연쇄 사임'이 불가피하다. 하석균 재정효율화 지원 특위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의원은 특위 위원장을 내려놓는 안을 고려하는 등 출마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초선의원들도 욕심이 없지 않다. A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위원회의 안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자리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B 의원은 "연쇄적 사임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철화

# 江原日報

2023 08 24 ( )  
03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 위한 지역특화산업 분과 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분과 워킹그룹 2차 회의가 23일 춘천시 서면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023 08 23 ( )

**江原日報****[동정]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 양숙희 도의원**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 양숙희 도의원(춘천)은 24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에서 열리는 환경분야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

**강원도민일보**2023 08 24 ( )  
09**江原日報**2023 08 24 ( )  
21

의에 참석.

◇박기영도의회안전건설위원장(춘천)은 24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에서 열리는 환경분야 워킹그룹 2차 회



박기영(왼쪽)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양숙희 도의원은 24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환경분야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 관련현안을점검하고관계자들을격려한다.

2023 08 24 ( )  
01

# 江原日報

## 도, 매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공개 ... 실효성 ‘글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조치  
표본 적고 장비·인력 부족 지적

속보=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 오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안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본보 23일자 1면 보도)한다. 동해안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표본이 적고 검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은 24일 오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전망이다. 동해안을 비롯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타격을 우

려하고 있다. ▶관련기사3·8면

이에 따라 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24일 오전부터 주요 수산물 위관장과 양식장 등 21곳에서 번갈아 수산물을 수거,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첫날 검사 대상은 동해 묵호 위관장이다. 검사에는 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날 오후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검사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히 공개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해안에는 검사 장비가 없어 당분간 춘천의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료를 갖고 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6억원을

들여 방사능 검사 장비 2대를 구입,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한해성 수산자원센터(고성)와 수산자원연구원(강릉)에서도 방사능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검사 대상이 일일 1kg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데다 다음 달 검사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 확보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체성 동해어업자원연구소장은 “제대로 된 검사와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재·최기영기자

2023 08 24 ( )  
01

# 江原日報



“일본산 수산물 안 팔아요” 23일 춘천시내 한 마트 수산물 코너에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오후 1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신세희기자

## 江原日報

## “어민 경영안정 지원” vs “제2의 태평양 전쟁”

〈국민의힘〉

〈민주당〉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23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촛불집회 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도내 정치권도 논쟁을 통해 낱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 2,000억원 지원=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

## 日 오늘 원전 오염수 방류 놓고 여야 대치 상황 지속

與 유류비 등 지급도 검토… 野 오는 26일 총집결대회

민주당 춘천갑지역위·정의당 도당 오늘 규탄 기자회견

르렀다”며 “지난해보다 많은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방류 중단 촉구=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 오는 26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총집결대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도내 정치권도 공방=이날 국민의힘 도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잉반응 즉각 멈추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친일 매국 프레임으로 덧씌워 공포선동, 과잉선동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

은 “도내 상인과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생계 위협에 놓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선동으로 국민과 도민을 기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도당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부끄럽습니다’ 논평을 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예산을 들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손해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춘천갑지역위원회는 24일 오전 8시 춘천 퇴계사거리에서 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정의당 도당도 이날 국민의힘 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동참한데 이어 24일 오전 8시 춘천 중앙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 江原日報

2023 08 24 ( )

08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 오후 1시 개시 전망”

삼중수소 농도 27일 공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현에서 저인망어업이 재개되는 9월 1일 이전에 측정 결과를 공표해 안전성을 알리고 소문(풍평) 피해를 억제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 면 지역 공습경보 울려도 대피할 곳 없어

## 민방위 훈련 6년만에 실시

지하공간 부족 훈련 못해  
대피소 80% 洞지역 몰려  
道 “지정요건 완화 건의 중”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지만, 면(面) 소재지는 ‘열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공간이 부족해 대피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 홍천 영귀미면 좌운2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114가구(220명)의 주민 대피 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 마을에는 대피소가 없고,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집에서 20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좌운2리와 같은 마을은 강원지역에 수두룩했다.

홍천·횡성군의 경우 홍천읍·횡성읍에만 대피소가 각각 19개, 9개씩 있고 나머지 면 지역(8~9개)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춘천, 원주, 강릉도 대피소가 100여개 가까이 있지만 80%는 동(洞) 지역에 몰려 있다. 강릉 옥계면도 이날 주민 대피 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민방공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 실시됐지만, 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면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2023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대피소는 벽 두께 30cm 이상, 바닥 면적 100㎡ 이상(농어촌 60㎡), 출입구 2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곳은 주로 ‘아파트 주차장’이다. 면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없다. 그나마 접경지는 행정안전부가 대피소 확충에 예산(1개소당 6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군 지역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면 지역 대피소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mailto:peace@kwnews.co.kr)



민방위 훈련 중 맞습니다 6년 만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3일 춘천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훈련 중에 도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신세희기자

## “상비약 없고 물 안 나와” 대피소 부실 관리 도마위

곳곳에 곰팡이·관리대장 부재… 보여주기식 지적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주민대피소의 부실한 관리 상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오후 1시께 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여를 앞두고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에 위치한 반암리 민방공 주민대피소는 잠복에 가려 입구조차 찾기 어려웠다.

내부 상태는 처참했다. 대피소 출입문을 열자 온갖 벌레 시체들과 함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물이 흐른 흔적이, 벽에는 곰팡이

가 눈에 띄었다. 가장 중요한 수도시설은 물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응급 처치세트와 상비약도 없는 데다 관리대장은 보이지도 않았다.

한 주민은 “언덕 위에 위치한 데다 차량 교행도 어려워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이 몰릴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수도 역시 유사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여주기식으로 건물만 지어 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대피소를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물품 등을 교체하고 있지만 상비약은 기한이 짧은

경우 6개월에 불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무관심도 겹쳤다. 이날 오후 2시 원주 중앙동에서는 훈련 사이렌이 울리자 안내유도요원 30여 명이 시민들을 지하상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했지만 시민들은 갈 길 가기에 바빴고 일부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차량 통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민 박모(여·48)씨는 “갑작스러운 사이렌으로 놀랐지만, 주변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볼 일을 봤다”며 “지하상가가 대피소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다. 김천열·김인규기자

江原日報

2023 08 24 ( )

02

##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지정 취소

동해이씨티 취소사유 해당... 동자청 하반기 공모 통해 재지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23일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결과,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의 경우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 명령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근거가 됐던 망상1지구 내 소유 토지 전체 215필지 약 178만 5,123㎡(54만평)에 대한 경매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으나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한 상태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건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지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 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해=전명록기자

2023 08 24 ( )  
03

# 강원도민일보

## 도내 첨단산업 예산 정부안 반영...내년 국비 확보 청신호

도, 주요 현안 2조1329억원 신청  
반도체·바이오사업 90억원 포함  
정부 예산안 내달 1일 국회 제출

내년도 예산안 역시 긴축재정·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등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한 국비 9조 5000억원 규모 달성이 이뤄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반도체 관련 예산은 요구안대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조 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이 중 연례·반복적인 법정업무를 제외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신청액은 2조 1329억원이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목표로 한 도는 SOC 사업에서 국비 1조 2542억원을 신청했다. 주요사업은 △강릉-제진 철도 4500억원 △춘천-속초 철도 4200억원 △제2경춘국도 500억원 △여주-원주 철도 1000억원 △일반국도 11개소 2106억원 등이다. 강릉

2024년 정부 예산안, 강원도 주요 신청 사업

국비 목표액	▶▶▶ 9조 5000억원
주요현안 예산	▶▶▶ 2조 1329억원
<b>바이오·의료 564억</b>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40억원
•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60억원
• AI헬스 바이오·R&D 구축 및 기술루트 개발·실증	20억원
<b>수소 237억</b>	
• 수소발전 시험평가 기반구축	33억원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76억원
<b>반도체 105억</b>	
•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
•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45억원
•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b>SOC 1조 2542억</b>	
• 강릉-제진 철도	4500억원
• 춘천-속초 철도	4200억원
• 일반국도(국도·국지도) 11개소	2106억원
• 제2경춘국도	500억원

~제진·춘천-속초 철도는 올해 말 각각 일반구간(5개·6개 공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2경춘국도는 시설설계용 역이 연내 마무리된다. 첨단 산업에도 힘을 쏟는다. 도는 바

이오 및 의료, 수소, 반도체 분야에 국비 906억원을 요청했다. 이 중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4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등은 정부 예산안에 사실상 포함됐다.

이와 관련,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강원지역 주요 예산사업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등이 잡혔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이, 기획재정부에 선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원주출신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이날 SNS 등을 통해 원주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관련 총 사업비 805억 중 내년도 분 80억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20억원) △AI 기반 K-디지털 헬스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30억원) 등이 정부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반도체 교육센터(2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관련 정부 예산안이 확정, 원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세훈·김덕형

2023 08 24 ( )  
03

# 강원도민일보



국회운영개선소위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양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4 ( )  
/ 19

## 태백선 EMU 효과 선로 개선 관건

-코레일에 연15억원 손실금 '폐광지법' 국비 지급 마땅

9월 1일부터 서울과 강원남부권을 연결하는 태백선에 간선형 전기동차(Electric Multiple Unit)인 EMU-150 신형열차가 도입됩니다. 내일(8월 25일) 태백역에서 MU-150운행을 축하하는 시승식이 열립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3시간 24분에서 3시간 6분으로 18분 줄어듭니다.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달리 단축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향후 KTX 고속열차 도입을 비롯한 교통망 확대 촉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태백선이 통과하는 정선, 태백, 삼척, 영월 등 남부권 폐광지역에서는 대체산업 육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열차 운행으로 사실상 준수도권에 편입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노후된 노선으로는 역부족입니다. EMU-150 도입이 폐광지역에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고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운행시간을 더 단축해야 합니다. 최대 속도인 시속 150km로 운행하려면 선로 개선이 필수입니다.

태백선은 석탄 및 광물 수송을 위해 만든 화물열차용 선로로 속도를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통과해 굴곡이 심합니다. 울들어 태풍이

내습했을 때도 호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운행이 중단돼 긴급 복구반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신형이어서 기존에 운행된 철도차량에 비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와 폐광지 시군에서 신형열차 도입을 위해 코레일 측에 1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해 씹쓸합니다. 열차 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코레일 측에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강원남부권 폐광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재정 자립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도 국가차원에서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이번 태백선 사례와 비교되는 곳이 바로 인접한 충북 제천시입니다. 제천은 중앙정부 재정 지원으로 2021년도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고 준고속열차 KTX-이음이 도입된 것입니다. 강원도는 도로와 교통시설이 더 늦게 개선되고 신설되면서도 도민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화 발전 동력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강원남부권 폐광지 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8 24 ( )

/ 19

## 바이오국가산단, 지역 균형 고려해야

-도내시군 특화단지 준비, 타시도 경쟁 불가피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이어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의약바이오분야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구촌 바이오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35조원에서 2030년 2221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2021년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2조원, 수출액은 12조원에 불과하지만, 의약품 개발 속도에 따라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바이오는 보건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결요양보하거나 포기할 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중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큰 정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동물세포와 인공장기 등 바이오 의약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를 공모합니다. 도내에서는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평창군이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스크립스 항체 연구원을 중심으로 체외 진단과 항체 및 의약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및 바이

오헬스 분야에, 홍천군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분야에, 평창군은 그린바이오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마다 선정 당위성을 내세울 만한 토대가 있습니다.

강원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모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화단지가 들어서면 많게는 수백조원까지 민간 투자 자금이 투입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인구유입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바이오 인프라를 갖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지정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큰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수도권 공모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 대기업과 연대해 공모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도 기존 인프라와 대기업 중심으로 선정된다면,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외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 江原日報

2023 08 24 ( )

/ 19

##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이다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 110km<sup>2</sup>, 강릉시 92.66km<sup>2</sup>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원주시는 단계동과 우산동, 기현동, 태장동 등 도심 일대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태장농공단지 경우 높이 45m 이하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입주 기업들이 건물 증축을 하지 못해 제3의 부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등 대책 발급에 나섰다.

강릉시는 1951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도심지 내 주거 및 상업지역 중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82%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강릉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2일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찾아 강릉도심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속초, 고성, 양양 등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고도제한 해제 특례는 담지 못해 해결이 쉽지 않다.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시·군의 도심 활성화 및 투자 유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의 수십년간 주둔으로 인한 소음, 재산권 제약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높이 제한 해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토지 가치가 회복된다. 무엇보다도 고도제한 해제는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커져 지역경기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낙후됐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역개발과 맞물려 있는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지자체와 군 당국이 원원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江原日報

2023 08 24 ( ) / 19

## 日 오염수 방류, 동해안 어민 보호 더욱 철저해야

일본 정부가 오늘(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방류 방침을 확정 후 2년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2년 만이다. 일본은 지난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 안전 보증을 받았고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도 구했다는 것을 방류 강행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본이 내년 3월까지 바다에 흘려보낼 오염수의 양은 3만1,200톤으로, 원전에 보관된 총량(134만톤)의 2.3% 정도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는 30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용인한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와 달리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고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내보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방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 정부는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심리적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동해안 수산업계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옆친 데 댔친 격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 하락은 불

보듯 하다. 벌써 복합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 대표 양식 품종인 멧게의 경우 판매량이 줄어 50kg당 14만원이던 가격이 올여름에는 10만원까지 내렸다. 가격이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데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가격은 곤두박질치게 된다. 따라서 어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심리적 불안 여전 정부, 피해 대책 치밀하게 강구해 나갈 때

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강원자치도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지속적 방류 관리체제 가동,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보다 치밀하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 나가야 한다.